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후 사후관리제도의 현황과 과제



허윤정 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지출 중에서 약제비 비중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실제로, 2018년 건강보험 약제비는 17조 8,464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에서 발표하는 약제비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 비중도 경상의료비의 21.3%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16.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OECD회원국 중 헝가리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¹⁾

이처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약제비가 국민건강이라는 가치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 20년간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해 왔다. 특히 '16년 말부터는 정부, 제약업계, 가입자, 전문가 등 각 직종별 대표가 참여하는 '약가 사후관리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개선에 이어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기준 개선, 사후관리에 필수적인 실제임상자료 수집 체계 마련까지 다양한 약가정책 연구와 개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19년 시행계획에서 현 수준의 약품비를 유지하되 지출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등재 약을 재평가하여 가격을 조정하고, 절감된 재정은 신약에 투자하며, 신약은 다시 급여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재평가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년 진료비주요통계』. 2019.,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8. 2018.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주안점은 재평가 즉, 사후 관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수용성이 높은 실제임상자료(Real World Data, RWD)의 수집·구축 기전이 필요하며, 의약품 등재 이후 RWD를 활용해 근거를 생성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기존의 제도와의 중복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용 가능한 사후관리 모델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13권 제4호에서는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후 사후관리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부의 정책방향성을 소개하고, 국내 의약품 관리 정책에 대해 총괄 정리하여 한번 되짚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국내 약가 사후평가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과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X